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8. 30.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급대상) 중·고(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자)·대학생
- 나. (지급액) 연 100만원
- 다. (지급방법)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하여 중고생은 1년 1회, 대학생은 1년 2회 지급
- 라. (선발기준) 추천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통리장의 자녀로 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기능·예체능에 소질이 뛰어나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 대회에 입상한 자

4. 참고사항

- 가. 참고자료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라. 입법예고 : 2023. 7. 27. ~ 2023. 8. 6.(1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2020. 6. 8. 붙임 참고) 등에 따라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추천일 기준 전년도에 임명된 통·시장의 자녀로 완화하였고, 장학생 대상 범위를 중·고등학교(각종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과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예체능 장학생 선발 자격을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이상 입상자로 구체화하고, 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5조의 장학생의 정원은 (현행) 연간 통·시장 정수 15% 이내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일정 비율 없이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의 장학금액은 (현행) 공납금 전액에서 학기당 50만원에 연간 총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의 장학금의 지급을 학년별 연액으로 지급하고 대학생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 환수와 관련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무상교육 환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 기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학생의 자격을 추천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통·리장 자녀로 완화한 점과,

통·리장 고령화에 따른 대학생 자녀를 둔 통·리장이 많지 않고 읍면동장의 대상자 추천 심사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장학생 자격에 대한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은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붙임 : 1. 관계법령
2. 비용추계자료
3.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현행 조례 >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정) 1995.01.03 조례 제0024호

(일부개정) 2006.11.28 조례 제06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1.28>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①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리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가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회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조중 통·리장의 근속기간은 종전에 통·리장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리장 재직기간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 후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정액 설정

(기존) 중·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 의무교육 대상으로 장학금 미지급

(개정) 중·고·대학생 / 연 100만원 →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자격조건 - 추천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통·리장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에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예체능으로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 대회에 입상한 자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중·고등학생)

-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준 대상자 없음. 추후 입학생 또는 재학생 이 생기는 경우 장학금 지급 가능하므로 현재 예산 추계 어려움.

(대학생)

- 대학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추천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통·리장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예체능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현재 예산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

2020. 6. 8.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추진 배경	1
II . 제도 현황	2
III . 문제점	4
1.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간 차별	4
2.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 · 공정성 미흡	5
3.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요구	6
4.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7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	8
IV . 개선 방안	9
1.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9
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11
3.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12
4.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13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14
V . 조치 사항	15

I. 추진 배경

❖ 대통령 강조사항 ❖

- ▶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음.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19.6.20.)
- ▶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20.1.2.)

- 전국 기초 지자체는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별 조례)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년 3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97.3%)가 운영 중

- 그러나 지급 대상, 선발 기준·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상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147개, 66.8%)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기준과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73개, 33.2%)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저해**

※ 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함(‘18.12. 국민신문고)

-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152개, 69.1%)에서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미비하거나 모호하여** 선발을 둘러싼 **청탁이나 자의적 선발 가능성 상존**

- 한편,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사상**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II. 제도 현황

□ 통장·이장 제도

- (운영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4조의2)
- (주요 업무 및 처우) 지역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그 업무 범위 및 활동 지원비 등을 규정

< 통장·이장 업무 및 활동지원비 >

주요 업무	활동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전달▪ 지역 민방위대장 및 영농회장▪ 복지지원대상자 발굴▪ 시·군·구 행사 등 각종 회의 참석▪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전달▪ 읍·면·동 행정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수당 : 월 30만원 이내▪ 회의참석(월 2회) 수당 : 1회 2만원▪ 명절 상여금 : 연 200%(60만원) 이내▪ 지자체별로 상해보험, 교통보조금, 시설 무료이용, 쓰레기봉투 지급 등

□ 통장·이장 자녀 대상 장학금 제도

- (도입 취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80년대 중반 ~)

※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2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지급 근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지자체 조례
-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중고생 자녀'의 경우 '기준 공납금' 또는 '일정 금액'(20만원 ~ 120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일정 금액'(50만원 ~ 200만원) 등 지급

※ '19년 기준, 중·고생 4,389명에게 31억원, 대학생 649명에게 7.6억원 지급

<조례상 지급 대상 현황>

지급 대상	중·고교생	고교생	고교·대학생	중·고·대학생	대 학생
지자체 수	46개	101개	60개	11개	2개

- (지급 방식) 통상적으로 총 지급액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분할 지급하며,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지자체도 존재
- (지급 정지·환수) 조례를 통해 통장·이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결정 후 사정변경에 따른 지급 정지, 환수 등 사유 규정

※ 제도 시행 이후 82개 지자체에서 총 404회, 563백만 원의 정지·환수 조치

< 조례상 지급 정지 사유 >

- 통장·이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사퇴, 해촉 등)
-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이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때
-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 장학금을 학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 해당 학교장이 지급 정지를 신청한 때
- 통장·이장이 타인의 지탄을 받을 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 학생의 학업, 품행이 지극히 불량한 때
-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도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때 등

Ⅲ. 문제점

1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 간 차별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상 지급 대상은 중·고교생, 지급액은 ‘기준 공납금’ (교육청별로 고시)으로 규정,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면 수혜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정

※ 지급 대상과 관련한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행안부는 지급 대상이 중·고교생으로 제한된다는 입장(‘19.6월, 국민신문고)

- 기준을 준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기준과 달리 공납금이 없는 중학생·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는 220개 중 73개

※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지자체별로 지급액 편차 상당 (중학생 : 20만원 ~ 50만원, 대학생 : 50만원 ~ 200만원)

<관련 민원>

-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 (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자녀 없음)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19.4. 국민신문고)
-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선발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공납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함(‘18.12. 국민신문고)

- 또한, ‘21년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바, 수혜 대상의 축소로 제도 도입 취지 희석

-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순히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규정하면서, 세부적·구체적 심사 기준 부재

< 관련 조례 >

-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학기 시작 이후 1개월 이내에 확정(○○군 조례)
-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시 조례)
-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납기 이내에 확정(○○시 조례)

- 한편, 통장·이장 경력이나 자녀의 학업 성적 등 세부적인 기준은 있으나 기준별 배점, 구간별 배점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 상존

< 관련 조례 >

제4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이·통장의 시정기여도
2. 학업성취도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시 조례)

- 항목 간 총점 배분, 심사 항목의 구간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구비한 지자체는 지극히 미미(2.7%, 6개/220개)

※ 학업 성적(50점), 통장·이장 경력(40점), 통장·이장 상훈(10점)으로 배점을 부여하고, 항목별로 구간에 따라 평가(학업성취도: 50~10점, 경력 기간: 40~10점, 상훈 등급: 10~7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대구 ○○구)

3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요구

- 통상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 상당 수 지자체에서 제출 서류에 학생의 종교, 사상을 기재하도록 규정
- ※ 220개 지자체 중 58개 지자체

< ○○시 조례 시행규칙 >	
(별지 ○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발췌)	
성적	품행
1. 성적증명서 “따로 붙임” 2. 장학생으로서 적격여부	1. 종교 : 2. 사상 : 3. 소행 : 4. 학습태도 :

- 또한, 신청 당시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와 중복·유사한 별도의 신청서를 대상자 선발 이후 단기간(7일)내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일부 지자체(12개)는 선발 전 신청서에 지급계좌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방지

<선발 전 신청서 및 선발 후 신청서 기재 내용(예시)>

선발 전 신청서	선발 후 (지급)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사항 ※ 첨부 : 재학증명서, 학교장추천서, 특기증명서(해당자) 등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계좌정보 ※ 첨부 : 통장 사본

4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 시 처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특정인에 대한 혜택 편중 가능성 상존

※ 조례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중복 여부 확인 및 지급 제외하는 사례도 존재

<중복지급 금지 규정 현황>

구 분	금지규정 있음	금지규정 없음
지자체 수(%)	145개(65.9%)	75개(34.1%)

- 한편,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 받은 액수를 불문하고 **확일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대상자의 불이익 초래

< 관련 조례 >

-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조례 제5조)
-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구 조례 제3조)
-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시 조례 제2조)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 기관 장학금 액수가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관련 조례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군 조례 제6조)
- 다른 장학금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장학금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군 조례 제7조)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

- 장학금 지급 도중 통장·이장의 사퇴, 부정 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정지나 환수가 필요함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근거 규정 미비

※ 실제로 121개 지자체는 제도 시행 이후 장학금에 대한 지급 정지·환수 실적이 전무한 반면, 경기 00시의 경우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05년 이후 매년 지급 정지(총 15회, 5,292만원) 조치('2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장학금 지급 정지·환수 사유를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지자체도 상당 수

※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경우 등

<지급정지 사유 규정 현황>

구 분	정지사유 미규정	정지사유 모호·불명확
지자체 수	14개	109개

< 관련 조례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군 조례)

IV. 개선방안

1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통장·이장 사기 진작이라는 운영 취지 부합,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교 학생 이외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현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21년 예정) 되는 점을 고려, 기존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장·이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u>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u>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 ----- 가. ----- ----- 1) ----- 중 중,고,대학교 ----- ----- ----- 2)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학생 ○원, 고등학생 ○원, 대학생 ○원 이내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조(자격) 장학생은 <u>중·고등학교</u> 에 재학중인 통(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각 호에서 성적, 특기 등 자격기준을 지자체별로 규정	제○조(자격) ----- 「 <u>초·중등교육법</u> 」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 <u>고등교육법</u> 」 제2조에 따른 대학 -----. ※ 각 호에서 성적, 특기 등 자격기준을 지자체별로 규정
제○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u>공납금 전액</u> 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u>공납금의 일부</u> 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장학금액) ----- ----- <u>중학생 ○원, 고등학생 ○원, 대학생 ○원</u> 으로 한다. ----- <u>해당 금액의 일부</u> 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양산시 사례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도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 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제○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u>일정한 기준</u> 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조(선발) ① ----- ----- --- [별표] 평가기준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평가기준 예시(○○시) >

1.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2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 분야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40	30	20	10	5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시장	구청장
점 수	10	9	8	7

- ※ 평가항목의 확대, 항목별 배점 등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예 : 평가항목으로 지방세 납부액, 다자녀 여부, 장학금 최초 신청자에 대한 가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 최초 신청 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생 선발 이후 일정 기한 내 지급청구서 중복 제출 절차 개선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제○조(선발결과 통보 등)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제○조(선발결과 통보 등) ① ----- ----- ----- 그 결과를 <u>신청자에게</u> -----.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u>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u>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u>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u>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삭 제>
<u>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u>	
<u>(별지 제○호 서식) 장학생추천서</u>	<u>별지 제○호 서식) 장학생추천서</u>
(성적)	(성적)
1. 평균	1. 평균
2. 석차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품행)	(품행)
1. <u>종교</u>	1. <삭 제>
2. <u>사상</u>	2. <삭 제>
3. 학습태도	3. 학습태도
4. 소행	4. 소행

- 해당 지자체 이외의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의 근거 마련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반영

현행	개선안(예시)
<u><신 설></u>	<p>제○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p>

< 순천시 사례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통장·이장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신설 및 명확화

※ 예시)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장·이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경우 → 지방세 납부액이 00원 이상인 경우 등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신 설>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가 통장·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p>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지자체별로 지급 정지 사유 추가·조정 시 조례로서 제6호 이하에 명확히 규정

V.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에 대학생 포함 및 장학금의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 기초 지자체	’21.12.
②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 통장·이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여부 등 	기초 지자체	’20.12.
③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신청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 기재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기초 지자체	’20.12.
④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근거 마련 	기초 지자체	’20.12.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거 마련		
⑤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통장·이장 사직, 해촉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조례에 명확화 ※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불확정적 사유 정비(불미스러운 행위 등) 	기초 지자체	'20.12.